



환경비전21(시안)의 추진전략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비전21 시안이
 지난 8월 공개 토론회를 가지면서 발표되었다. 환경비전21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토론회를 거쳐 보다 나은 환경비전을 위해
 각계의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비전21(시안)중 그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1) 예방적 환경관리의 강화

- ① 환경영향의 장기평가와 고려
 - 우리가 내리는 현재의 결정은 미래의 수세대에 걸쳐서 경제개발이나 환경의 질에 영향을 줌
 - 개발정책과 사업 등 우리의 행위가 초래할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미칠 환경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양식을 선택함

- ② 장기계획기법의 개발과 활용
 - 한번 형성된 생활양식은 쉽게 고칠 수 없으므로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출발점으로 함
 -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과 산업계획은 물론 에너지, 자원개발, 산업개발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집행하여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체계를 구축함
 -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
 - 환경과학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청정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 그 자체가 환경친화적인 형태가 되도록 함

· 환경과학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으로 환경라운드(Green Round)로 표현되는 무역과 환경을 연결하려는 선진국 시도에 대응함

2) 조화와 통합의 추진

- ① 환경과 경제의 조화 추진
 - 산업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제와 환경의 상충·갈등관계를 상조·보완관계로 전환하여 경제에 도움을 주는 환경정책과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함
 - 경제개발성적을 환경국민복지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환경규제체계를 개혁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축함
- ②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적절한 배분
 - 인구증가, 소득증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개발수요도 적절히 만족시켜 주면서 우리자신과 후손을 위해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함
 - 절대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엄격히 판별하여 보전지역에서의 개발은 절대 억제하고, 개발가능지역에서

의 개발은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유도함

③ 통합적 환경관리의 추구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환경정책 그 자체를 통합하여 한 환경문제가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 지역적인 환경관리를 지양하고, 생태시스템에 입각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정책을 운영함

3) 오염자부담 원칙의 강화와 경제적 수단의 활용

① 오염자 부담원칙의 강화

- 오염을 야기한 자가 오염방지비용 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여 적정환경관리와 환경갈등조정 기조로 삼음
-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오염방지행위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른 엄격한 제재제도를 마련함

② 사용자 부담원칙의 활용

- 막대하게 소요되는 환경관리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환경자원의 이용자에게 미래세대에 대한 지대(Rent)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함 · 공원 입장료, 상수도세, 지하수부담금, 입어세(낚시면허세 등) 등 환경관련 요율을 현실화하고 강화하여 자원절약을 유도하면서 자원보호비용과 파괴된 자원복구비용으로 충당함

③ 경제적 유인장치의 활용

- 비효율적이면서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직접규제방식을 탈피하고 간접적인 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함
-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예치금, 쓰레기수거료, 하수도세 등을 재평가하고 그 요율을 현실화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세(또는 탄소세) 등 새로운 경제적인 유인장치를 도입

하되 이에 사용하는 조세부담은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함

4)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및 책임분담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환경정보의 제공

-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생활환경, 환경생태계, 지구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종합환경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전문가, 학계, 민간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
-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환경피해자를 위한 개방참여형 환경관리로 모든 환경관리분야에 대해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간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환경정책상의 역할분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여 그 역할을 증대시킴
- 중앙정부는 정책수립과 지자체의 정책조정을, 자치단체는 이같은 정책의 집행업무를 담당함
- 위해성이 커서 고도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지역이기주의와 개발우선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환경관리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 또는 중앙의 재심사제도를 활용함

③ 민간부문의 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주민과 산업체를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폐쇄적이고 경직될 우려가 있는 공공부문의 정책과정을 보완함
- 환경마크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주민참여, 다양한 주민의견수렴기구의 설립,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확대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며 창의성을 활용함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환경비전 21의 운영체계도

